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ince 200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T.02-734-3924, F.02-723-9995 civic21@kornet.net www.civilnet.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운동 담당 기자.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준) (담당 :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011-9962-0386,
발 신 추경숙 환경연합 사회연대팀장 017-351-7001,
고계현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757-7380)
제 목 4.13 총선 1주년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1년 4월 13일(금), 총7쪽.

보 도 자 료

4.13 총선 1주년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2001년 4월 13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준)는 4월 13일 오전 11전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4.13 총선 1주년,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치개혁위원회(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은희(연대회의 상임대표, 여성연합 상임대표)선생님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윤경로(연대회의 상임대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선생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윤준하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장이 사업계획 I(정치자금 투명성확보운동 및 지역구의원 1년평가)를,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사업계획 II(정치제도개혁운동)을 발표하였다.

- ※ 별첨 1. 기자회견문
2. 사업계획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인사말 : 지은희 (연대회의 상임대표, 여성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윤경로 (연대회의 상임대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업계획발표 1 :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2 : 윤준하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장)

4·13 기자회견문

정치개혁을 위한 새 장정에 나서며

우리는 작년 4·13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온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낙천·낙선운동,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공명선거운동은 우리 사회가 다 바뀌어도 정치만은 안 바뀔 거라고 쉽게 말하는 세대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선정한 부패비리사건 연루자, 저질후보, 민주헌정질서 파괴사범 등을 대거 심판함으로써 정치권에 엄중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의 정치권은 큰 변화 없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3대 개혁입법은 여전히 그 처리가 불투명하며, 산적한 민생·개혁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돈세탁방지법의 처리과정에서 정치자금만을 제외로 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에 윤락업소의 영수증을 버젓이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을 개혁시키기 위한 새 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선거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가겠습니다.

첫째, 정치개혁특위는 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정치자금은 그 동안 치외법권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백 억원씩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년 동안 정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정치자금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운동을 진행합니다.

둘째, 정치개혁특위는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에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유권자는 선거 시기에만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상설적인 정치감시와 평가를 통해 국회 파행, 당적 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 제기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치개혁특위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공직후보선출 과정의 민주화와 여성할당제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정당법,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선거법으로 개정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치권의 무능력과 이전투구를 지켜만 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오늘의 정치가 우리 사회 개혁전반을 가로막는 병목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격력에 힘입어 멀고도 어렵다는 정치개혁의 새 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지도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200. 4.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운동

1. 목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의 1단계로서 정치자금 운영의 실태를 조사,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운동을 진행한다.

2. 세부 계획

1) 지구당 정치자금 실태 조사

- 수입부분의 당비 비율조사, 특히 당비 중 특별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조사
- 증빙서류 생략가능(10만원) 이하의 비율과 증빙서류를 갖춘 내역과의 비교
- 의정활동비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들 추산
- 증빙서류 미첨부한 내역 조사와 금액이 상식 이상으로 클 경우, 그 거래처에 대한 방문 조사 → 증언 확보

2) 중앙당 정치자금 실태 조사

-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 부실증빙 및 용도 외 지출에 대한 조사
- 정책개발비에 대한 엄정한 실사
- 정당, 후원회의 수입 및 지출실태 조사

3) 조사 및 분석

- 지역 및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회계보고 필사
- 분석 및 자문팀 구성과 법률팀 구성

3. 추진 일정

- 4월 13일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 돌입 선언
- 4월 1주 ~ 5월 2주 : 중앙당의 수입지출 실태 집중 조사
- 5월 3주 : 분석결과 중간 발표 → 최종발표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 사업

1. 목표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고, 국회 파행, 당적 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할 전국적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6월 5일은 16대 개원 1주년이 되는 날 낙선운동의 직간접 영향에 의해 당선된 의원 중 당적을 변경했거나 의정활동의 반개혁적 성격이 명확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2. 세부 계획

1) 방향

- 5월을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의 달로 설정
- 전국 공동으로 지역구 의원 초청 의정평가회 추진
- 지역구별로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
- 정치관계법 및 주요 개혁입법,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치적 소환·탄핵운동 전개

2) 의정평가 기준 마련

- 주요 의사일정 출석 상황 (상임위, 본회의)
- 발의 법안 / 발의 법안 중 통과법안
- 당직 여부 / 당직 재직시 주요 활동
- 주요 공약 추진 상황
- 정치관계법(연대회의안)/ 지방자치법/ 3대 개혁입법 / 기타 개혁입법에 대한 상세한 입장

3. 추진 일정

- 의정평가 질의서 발송 (4월 중)
- 5월 중 지역구의원 의정평가대회 소집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 사업

1. 목표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고, 국회 파행, 당적 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할 전국적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6월 5일은 16대 개원 1주년이 되는 날, 낙선운동의 직간접 영향에 의해 당선된 의원 중 당적을 변경했거나 의정활동의 반개혁적 성격이 명확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2. 세부 계획

1) 방향

- 5월을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의 달로 설정
- 전국 공동으로 지역구 의원 초청 의정평가회 추진
- 지역구별로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
- 정치관계법 및 주요 개혁입법,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치적 소환·탄핵운동 전개

2) 의정평가 기준 마련

- 주요 의사일정 출석 상황 (상임위, 본회의)
- 발의 법안 / 발의 법안 중 통과법안
- 당직 여부 / 당직 재직시 주요 활동
- 주요 공약 추진 상황
- 정치관계법(연대회의안)/ 지방자치법/ 3대 개혁입법 / 기타 개혁입법에 대한 상세한 입장

3. 추진 일정

- 의정평가 질의서 발송 (4월 중)
- 5월 중 지역구의원 의정평가대회 소집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1. 목표

2002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등 지체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이루어냄으로써 낡은 정치시스템을 개혁하고 유권자 참여의 공간을 확보한다.

2. 개정 방향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회계감사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 의무화
-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 철저한 회계감사
- 공개기간의 제한 철폐
- 회계장부 보존기간의 연장

②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

- 정당의 자생력 강화 노력과 연동해 지급 (Matching Fund)
- 형평성 제고 : 배분방식의 개선

③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규제강화

-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
- 정치자금법 위반시 처벌강화

2) 정당법

① 공직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화

- 상향식 공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공직후보자 공천 무효, 공천이 무효일 경우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되도록
- 공천무효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제도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②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도입 - 당선 가능한 비율 법제화

3) 선거법

①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대결 육성을 위한 선거법 제정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포함한 개혁법안 도입
- 선거구획정시 게리맨더링 방지 제도화

②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

③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제한 폐지

-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범위를 선거법 제 114조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축소하고, 그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추진 일정

- 5월 중 공동안 초안 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원 서명 추진
5-6월 (지역별 의정평가회와 연결, 전국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담당)
- 입법청원 : 적정 시기 모색

일단 정치개혁위원회(준) 사업관련 문의는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02-725-7104, 011-9962-0386, frontier@pspd.org